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접경지역 고양시의 역할

정유석
김혜인



한안연구보고서 2018-001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접경지역 고양시의 역할

연구 책임자

정유석(고양시정연구원, 시민정책연구부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김혜인(고양시정연구원, 시민정책연구부 위촉연구원)

발 행 일 2018년 6월 30일

저 자 정유석, 김혜인

발 행 인 양영식

발 행 처 고양시정연구원

주 소 10393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태극로 60 빛마루방송지원센터 11층

전 화 031-8073-8352

홈페이지 www.gyri.re.kr

인 쇄 처 디자인 · 편집 · 인쇄 전문기업 북인북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의 견해로서, 고양시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ISBN 979-11-963100-9-7

요 약

□ 들어가며

- 문재인 정부는 2017년 7월 '베를린 구상'을 시작으로 북한과 평화적 교류를 위한 노력을 지속했으며, 김정은 위원장의 2018년 신년사를 시작으로 남북의 해빙분위기가 조성되면서 평창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함
- 이후 남북은 고위급회담을 이어가면서 특사를 파견하는 등 중대한 사안들에 대한 협력과 일치의 모습을 보여줌

□ 남북 정상회담의 만남

- 예수를 시작으로 스포츠교류로의 확대, 더 나아가 4월 27일 판문점에서 분단이후 처음으로 북측 지도자가 남측지역을 방문하는 기념적인 정상회담을 개최하면서 '판문점 선언'이라는 결과를 도출함
- '판문점 선언'에는 남북관계의 전면적인 개선 의지와 완전한 비핵화의 필요성을 재확인하면서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체결을 남북 지도자가 직접 밝힘으로 이전 협상들 보다 강력한 구속력을 보였으며 이후 후속조치와 후속회담 역시 바로 시작됨

□ 북미 정상의 만남

- 1990년대 북핵 위기 이후 처음으로 만난 북미 두 정상은 앞으로 많은 과제가 남았지만 두 국가 모두 첫 발걸음을 만족스럽게 시작한 것으로 보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면서 북한과 미국의 지도자가 마주보며 악수를 하는 극적인 장면이 연출됨. 이번 북미합의문은 과거와는 다르게 두 국가정상이 직접 합의한 것이 큰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논란의 요지가 많았던 CVID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북한체제안전보장과 비핵화라는 두 개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함께 노력할 것으로 기대됨

□ 북중 정상회담의 만남

- 이런 급격한 정세 변화 속에서 북한은 중국을 세 차례나 방문함. 첫 방문은 2018년 3월, 김정은 위원장이 특별열차편으로 베이징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과 만남을 가진 것으로 중국이 급변하는 한반도 상황에서 차이나패싱을 우려한 것으로 보임. 두 번째 만남은 5월, 4.27 남북 정상회담을 마친 결과를 나누고 6.12 북미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은 중국 다롄에서 만남을 가짐. 마지막으로 6월 북미회담 이후 김정은 위원장은 시진핑 주석을 다시 한 번 만나 북중 간의 우호관계를 확실히 보여줌

□ 통일시대의 남북 거점도시, 고양

- 한반도의 남과 북을 포함한 미국, 중국과의 접촉은 앞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많은 변화가 예상되며 다양한 변화에 대한 흐름 분석과 향후 예측을 기반으로 지방자치시대에 고양시 지방정부 차원의 즉각적 대응 가능한 모델 설정이 중요해 지고 있는 시점

- 통일시대 남북거점도시로써 고양시에 대한 구상은 지역 경제 발전과 시민공감대 형성, 지방 정부 지원 민간 주도의 형식으로 구축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비전과 세부 정책 과제를 수립해야 함. 또한 100만 대도시 특례시 지정을 통해 경기 북부 평화경제 특별시를 추진하여 경기북부 도시 연계와 평화통일경제특구 유치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다음의 세 가지 교류협력방안을 고민해봐야 할 것.
- 첫째, 남북문화예술교류의 활성화를 위해 남북 예술인 합동공연 및 정기교류전을 추진해야 함. 남북 간 수많은 문화행사가 있었지만 정례화 되지 못해 정치적 일회성 이벤트 행사로 전락하는 경우가 다수였음. 그러나 고양시의 어울림누리, 아람누리 그리고 방송 영상단지를 활용한 정기적 남북 공동 주관 통일문화예술제 등 다양한 교류를 추진할 수 있음
- 둘째, 이미 한차례 국제 역도대회를 공동으로 개최한 경험을 가진 고양시의 장점을 살려 스포츠교류를 선도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준비를 갖추어야 함. 고양시는 역도 뿐 아니라 상당 수준의 빙상단도 보유하고 있으며, 국제수준의 경기를 치를 수 있는 고양종합운동장과 고양체육관이 소재해 있음. 비정치분야 특히 스포츠 분야의 교류협력의 역할이 매우 커진 상황에서 북한이 제안한 2021년 동계 아시안게임의 공동 개최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임
- 셋째,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고양시가 평화경제 특별시로써 특이점을 부각시켜야 함. 4.27 남북정상회담 기념 고양시 국제평화마라톤대회를 개최하고 한강 하구 남북공동연구, 생태, 역사 관광벨트 조성 등 다양한 교류활동을 통해 남북의 접착지대로 자리 잡으며, 고양시 통일기록관 네트워크 구축으로 평화통일 도시의 이미지를 공고히 할 수 있음

제장 서론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 국제사회의 유례없는 고강도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가 계속되어 한반도에는 전쟁의 위협이 고조되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발생함
- 하지만 베를린 선언 이후 지속되어온 문재인 정부의 일관된 대북정책은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이른바 '한반도 운전자론'을 현실화시킴
-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로 남북 해빙 분위기는 1월 9일 남북고위급 회담, 12년만의 대북특사의 교환과 이어진 북한의 비핵화 의지 표명, 핵과 관련된 전략적 도발 중단을 약속 등의 의미 있는 사건들이 연이어 등장함
- 드디어 4월 27일,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었으며, 이는 한국전쟁 이후 처음으로 북한의 지도자가 남측을 방문하는 사건이며 남북관계에 커다란 변곡점이 됨
- 한편 북핵 위기 25년 만에 처음으로 북미 정상이 직접 만나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 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그 중재자 역할을 우리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해결했다는 것 자체로도 큰 의의가 있다고 판단됨
- 이에 앞서 3월 25~28일에 성사된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은 북중 관계 복원을 통해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에서 더욱 융통성 있는 전략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확보된 것으로 보이며 이에 관한 면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임
- 이와 같이 전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남북·북미·북중 간의 정상회담과 한반도를 둘러싸고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동북아 정세를 즉각적이고 냉정하게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경기북부의 최대도시이자 대표적인 접경지역 고양시가 다양한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전진기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최신 현안에 대한 신속한 정보에 대한 판단과 근거로 고양시의 당면과제를 도출하여 이에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임

2. 주요 연구내용

- 평창올림픽 이전의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환경 정리
- 평창올림픽 전후 남북 교류와 후속 대응 모색
- 변화된 남북대화 여건 분석
- 북중 정상회담 의미 분석과 이후 상황 고찰
- 남북정상회담의 의미와 한반도 정세 분석
- 북미정상회담과 동북아 환경 분석
-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고양형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모색

3. 기대효과

- 변화된 한반도 정세에 대비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미래를 설계해야 하며, 이를 위해 먼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사안들을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올바른 방향 설정이 가능함
- 어렵게 복원된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는 한 번의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단계적·연속적으로 나아가야하며 이를 위하여 고양형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개발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할 수 있음
- 한반도 정세에 대한 변화 흐름 분석과 향후 예측을 기반으로 지방자치 시대 고양시 지방정부 차원에서 즉각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모델을 설정함

제2장 최근 한반도 정세 분석

1. 평창올림픽 이전의 남북대치상황

□ 문재인 정부 출범시기

- 2016년 2월 개성공단 폐쇄된 이후 남북관계는 완전한 단절상태였고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연락채널조차 부재했음. 북한은 핵능력 고도화를 위해 지속적 도발을 감행하면서 제재가 가해지는 악순환으로 한반도 전쟁 위험이 고조됨
- 북한은 2017년 2월 12일 부터 지속적으로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였고, 그해 9월 3일에는 6차 핵실험을 실시함. 11월 29일에는 '화성-15형'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핵무력 완성'을 선포함
- 이에 대응하여 UN 안보리의 강력한 대북제재(2371호/2375호) 결의 등 국제사회의 제재·압박이 강화됨

□ 문재인대통령의 '베를린 구상'

- "나와 우리 정부가 실현하고자 하는 것은 오직 평화입니다."
 - 2017년 7월 6일 문재인 대통령은 독일 통일조약 협상이 이뤄졌던 알테스 슈타트하우스(Altes Stadthaus)에서 북한과의 대화 재개와 평화체제를 위한 노력을 제안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베를린 구상'을 선포함
 - '베를린 구상'의 주요 안건은 민족공동체 회복을 위한 공존공여이고 오직 평화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북핵의 완전한 폐기와 한반도 비핵화를 통한 동북아에서 가장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현안에 대한 해결임
 - 마지막으로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함으로 종전선언과 한국전쟁 관련국간의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으로 이는 결국 2018 <남북정상회담>의 주요의제로 선정됨

〈표 2-1〉 문재인정부의 한반도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정책방향

오직 평화	“통일은 쌍방이 공존공영하면서 민족공동체를 회복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통일은 평화가 정착되면 언젠가 남북 간의 합의에 의해 자연스럽게 이뤄질 일입니다. 나와 우리 정부가 실현하고자 하는 것은 오직 평화입니다.”
한반도 비핵화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와 평화체제 구축, 북한의 안보·경제적 우려 해소, 북미 관계 북일관계 개선 등 한반도와 동북아의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항구적인 평화 체제 구축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종전과 함께 관련국이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한반도에 그리는 새로운 경제지도	“끊겼던 남북 철도는 다시 이어질 것입니다. 부산과 목포에서 출발한 열차가 평양과 북경으로, 러시아와 유럽으로 달릴 것입니다. ... 남과 북은 대륙과 해양을 잇는 교량국가로 공동번영 할 것입니다. 남과 북이 ‘10.4정상선언’을 함께 실천하기만 하면 됩니다.”
비정치적 교류협력 사업 추진	“대한민국 정부에 가족상봉을 신청한 이산가족 가운데 현재 생존해 계신 분은 6만여 명, 평균 연령은 81세 입니다. 북한도 사정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분들이 살아 계신 동안에 가족을 만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어떤 정치적 고려보다 우선해야만 하는 시급한 인도적 문제입니다.”

□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 관계개선을 위한 국면전환

- 김정은 위원장은 2018년도 신년사를 육성으로 1월 1일 오전 9시 30분(평양시 기준) 조선중앙TV를 통해 방송함
- 국면전환 방법으로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하면서 평화의 이미지를 갖고자 한 것으로 보이며, 언급 내용 중 '국가핵무력 완성'을 명분 삼아 남북관계에 많은 비중을 할애, 적극적인 대화제안 제스처로 국면전환과 "평화를 사랑하는 책임 있는 핵강국"의 이미지를 전달하는데 주력한 것으로 보임
- 미국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자제하는 한편, "지금처럼 전쟁도 아니고 평화도 아닌 불안정한 정세가 지속되는 북과 남이 예정된 행사를 성과적으로 보장"할 수 없고, "서로 마주앉아 관계개선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할 수"없다고 이야기하면서 한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화해와 올림픽 참여에 대한 의지를 보임

○ 한국의 '평창올림픽'과 북한의 '정권수립 70주년'은 '민족적 대사'

- 김정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북한정권 수립 70돌과 평창 동계 올림픽을 '민족적 대사'로 표현하며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와 평화적 환경 조성'의 필요성 제기함
- 과감한 출로로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와 평화적 환경 조성 마련을 위해 평창올림픽 대표단 파견, 다방면의 남북 교류협력 실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논의 등을 제시하면서 적극적 남북 당국 간 회담 개최의지를 시사
- 2018년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는 북미관계의 대결 국면을 우회하는 남북관계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평화' 공세 차원으로 해석 가능하며, 2018년 상반기 올림픽 참가와 성공적 개최를 명분으로 도발을 자제하면서 북미대화의 조건을 자연스럽게 충족시킨 후 중·하반기 북미 당국 간 대화를 모색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임

2. 남북 고위급 회담과 남북특사교환

□ 남북고위급회담 진행과정

○ 남과 북의 만남을 위한 준비과정

- 2018년 1월 9일 남과 북은 판문점에서 개최된 남북고위급 회담을 통해 평창 동계올림픽 참여와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적극적 협력을 약속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남북고위급 회담과 각 분야 회담 개최를 논의함
- 이후 남과 북은 예술교류를 먼저 시작하고자 1월 15일 판문점 실무회담에서 삼지연 관현악단을 비롯한 140여명의 예술단을 남측으로 파견하는 것과 강릉과 서울에서의 공연 진행에 합의하였고 성공적인 성과를 거둠
- 1월 17일 판문점 남측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실무회담을 진행했으며, 한반도 기를 앞세운 남북 선수단의 공동입장과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 등 구체적인 사안을 확정함

○ 평창올림픽을 통해 만남 고위급인사

- 뉴욕 현지시간으로 2017년 11월 13일, UN총회에서 평창올림픽 기간 동안 '휴전결의안'이 채택되면서 뒤이어 국제올림픽 위원회(IOC) 토마스 바흐(Thomas Bach)위원장이 방북을 희망함. 남북의 고위급 만남을 넘어 국제기구 인사들과 북한 인사가 만나기 시작한 것으로, 12월 5일에는 제프리 펠트먼(Jeffrey D. Feldman) UN사무차장이 평양을 방문함
- 또한 북한은 평창 동계올림픽에 고위급 대표단과 함께 민족올림픽위원회 대표단, 선수단, 응원단, 예술단, 참관단, 태권도 시범단, 기자단 등 대규모의 북한 대표들의 방남을 추진함

□ 남북의 특사교환 과정

- 김정은 위원장의 특사로 대한민국에 온 김여정 제1부부장 등 북측 인사들은 2월 10일 청와대에서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담은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통해 남북정상회담 의지 전달함
- 답방 형식으로 평양을 방문한 대북특사단은 정의용 안보실장을 단장을 구성되었으며, 3월 5일 평양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 문재인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만찬을 나눔
- 남북 특사교환을 통해 합의된 사항들은 첫째, 남과 북의 지도자는 4월 말 남측지역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약속과 이를 위한 구체적 실무협의 진행하기로 함. 둘째, 군사적 긴장 완화와 긴밀한 협의를 위한 정상간 Hot Line 설치를 통해 만남의 벽을 낮추기로 합의함
-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표명했으며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한 대화용의 또한 내비치면서, 이를 위해 대화기간 동안 추가 핵 실험 및 탄도미사일 실험 중지에 대한 약속과 남측 태권도시범단과 예술단을 평양에 초청하기로 합의함

3. 북중회담의 의미와 평가

□ 급변하는 정세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는 중국

- 북미회담에 대한 중국의 입장
 -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 합의문에 대해 중국 왕이(王毅) 외교부장은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여는 합의문을 작성한 것이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상호 동등하고 평등한 위치에서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눈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평가하면서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지지한다는 공식 견해를 밝힘
 - 중국은 지난 반세기 넘게 이어져 온 북미 간 상호대립과 적대관계가 크게 개선되었고,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중요한 진전을 남긴 정상회담이라고 평가함. 특히 북미정상회담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할 수도 있다는

것을 돌발적으로 언급한 것에 대해 매우 비중 있게 다루면서 한반도 정세의 새로운 변화로 설명함

- 향후 중국은 남북·북미 정상회담 협의 과정에서 한반도 문제의 주요 이해 당사국이자 동북아 역내 안정자로서 중국의 핵심이익 수호와 책임 대국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자국의 영향력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임

□ 세 차례의 북중 정상회담

○ 1차 3월 25일~28일, 7년만의 만남

- 2011년 5월 김정일의 방중 이후 7년 만에 성사된 북한지도자의 방중으로 김정은 위원장은 특별열차를 이용해 베이징을 비밀리에 방문했으며 집권 6년만의 첫 해외순방이었음
- 1차 북중 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 변화 분위기에 '차이나 패싱'우려를 잠재우고자 한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 과학원 중춘관 '중국 과학 혁신 성과전'을 방문해 핵물리, 우주 등 자연과학 기술 분야의 성과를 살핌

○ 2차 5월 7일~8일, 중국의 전략적 입장표명

- 4.27 남북정상회담을 마치고 6.12 북미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과정에서 중국을 방문한 것으로 보이며 전용기를 타고 중국의 다롄에서 시진핑 주석과 회동함
- 북한은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전통적 우방국인 중국과 전략적으로 소통하고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미국에 대한 협상력을 높이려는 시도를 보인 것으로 판단됨
- 중국 입장에서는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북미 정상회담 합의과정에서 철저하게 배제되었던 상황을 만회하고 향후 한반도문제에 대한 자국의 입지와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북한과 정상회담을 진행했다고 볼 수 있음
-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사에 중국이 지지의사를 분명히 하면서 기존 남·북·미 3국으로 움직이던 구도가 남·북·미·중 4국으로 변화되었으며, 중국은 자국이 배제된 상황에서 북미관계 정상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질 경우 미국이 한반도에서 전략적 우위를 유지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판단됨

- 2차 만남에서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에 대해 남북한 당사자 해결이 기본원칙이지만 중국을 중요한 이해관계자로 역할하고 싶은 의사를 북한에 전달하고 협력을 요청했을 가능성이 높음

○ 3차 6월 19일~20일, 북미회담 이후 북중의 만남

-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은 중국을 방문하면서 북미 정상회담의 내용을 전달하고 중국의 협력을 요청했을 것으로 생각됨. 특히 김정은 위원장은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에게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완화를 앞당기는데 중국의 역할을 주문했을 것으로 예상됨
- 김정은 위원장은 수행인원을 대동하고 중국의 중국농업과학원 국가농업과학기술혁신원(농업과학원)과 베이징시 궈도교통지휘센터(교통센터), 북한 대사관을 방문하면서 적극적으로 경제시설을 둘러봄
- 청와대는 북한의 이러한 중국 방문을 비핵화에 한걸음 더 진전한 것으로 평가하며, 중국이 비핵화를 안정적으로 완성하는데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만들어 가는데 있어서 밀접한 이해 당사국으로 중국이 포함되기 시작함

□ 앞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진로

- 향후 중국은 북미정상회담 성공을 바탕으로 신안보관, 공동안보, 인류문명공동체 등과 같은 북한의 체제안전보장 우려를 동시에 고려하는 비제로섬(zero-sum)해결방식을 추구해 나갈 것으로 보임
- 중국은 북한이 본격적인 비핵화의 길로 들어선다면 자연스럽게 한반도 평화협정, 주한미군, 한미동맹 문제 등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다시금 필요하다는 분위기를 북한과의 공동보조를 통해 조성할 가능성이 높아 보임
- 또한 한반도 문제의 주요 당사국으로 역내 강대국 위치와 역할을 강조하며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임. 이미 세 차례의 북중 정상회담 이후 매우 빠른 속도로 북중 양국 관계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북한 스스로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밝혔고, 북미 간 비핵화 합의를 도출하였기 때문에 본격적인 북중 간 경제협력 및 인적교류가 예상됨

- 특히 완전한 비핵화 과정에서 이루어질 대북 경제지원 단계에서 북한의 경제시찰단이 중국을 방문해 개혁개방의 경험과 각종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배울 것으로 예상되면서 때문에 중국의 대북영향력은 한층 더 확대될 것으로 보임

4. 남북정상회담의 의의

□ 남과 북 정상회담의 만남

- 2018년 4월 27일 판문점「평화의 집」에서 2018<남북정상회담>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오전·오후 2차례 회담과 만찬을 하였으며, 남북한 정상은 100분간의 확대정상회담과 30분간의 '벤치 대화'를 통해 3개조 13개항에 이르는 합의문에 서명함
 - 남북 정상은 '한반도 평화시대 개막을 선언하고 남북관계의 전면적·획기적 발전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 등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협의했으며, 「판문점 선언」에 합의함
- '완전한 비핵화' 표현의 등장
 - 지난 3월 초 남북정상회담 개최 사실이 발표된 이후 청와대는 여러 차례에 걸쳐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은 남북관계를 뛰어넘어 비핵화와 평화체제 등 북미정상회담 연결의 제가 될 것임을 암시한 바 있음
 - 북한은 판문점 선언을 통해 발표된 3개조 13항의 합의 사항 중 남북관계 발전 및 군사적 긴장완화 분야 9개항은 물론, 항구적 평화체제 분야에서도 불가침, 군사적 신뢰 구축 등 남북 양자 간 실천이 요구되는 의제들을 포함시킴으로써 남북관계의 전면적 개선 의지를 분명히 했으며, 남북정상선언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의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추진 의사를 밝힘으로써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를 만들어내겠다는 목표를 분명함
 - 과거 남북의 각종 합의문을 통해 비핵화 또는 핵문제의 해결이 언급된 적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정상회담 합의문을 통해 비핵화를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

임.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 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한 것은 비핵화의 수준과 범위를 처음으로 명시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합의로 평가됨

- 이러한 합의가 북한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 핵미사일 시험발사 중지와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등 사실상 핵동결조치를 이행한 단계에서 도출되었다는 점도 의미를 더하는 부분임

○ 북미정상회담 결과에 따른 남북교류협력 재개 기반조성

- 남과 북은 남북정상회담 합의사항의 철저한 이행을 강조하며 남북관계의 불가역성을 강조했으며, 차기 정상회담 및 판문점 선언 이행의 시간표를 제시함으로써 남북관계 개선의 속도를 강조함.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1년차 정상회담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남북관계 개선의 속도를 강조했고, 김정은 위원장이 '만리마 속도전'을 내세우며 화답함
- 정상회담 다음날 북한은 노동신문에 비핵화 등의 표현이 담긴 판문점 선언을 포함하여 정상회담 결과를 대대적으로 보도함. 우리 정부는 정상회담 직후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를 '남북정상회담 이행 추진위원회'로 개편하며 범정부적 후속조치를 바로 시작함
- 남북관계 개선작업이 전방위적으로 속도감 있게 전개되면서 당초 경제협력 분야가 논의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반대로 동해선과 경의선 철도 및 도로연결에 합의함. 대북 제재와 연계되어 있는 경협 프로젝트를 남북정상선언에 포함시킴으로써 북미정상회담 결과와 함께 즉각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 것으로 보임
- 또한 6.15를 비롯한 남과 북에 함께 의미가 있는 날들을 계기로 당국과 국회, 정당,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민족공동 행사를 적극 추진하여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남북 당국이 다양한 분야의 교류 협력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오랜 기간 중단되었던 민간교류를 빠른 속도로 회복하여 당국 간 신뢰 증진에도 기여해야 할 것

□ 앞으로 대한민국의 역할

- 군사적 신뢰 구축은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단계로 가는 출발점으로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음. 또한 체육 회담과 적십자회담을 교류부문에서 구체적 성과를 도출하여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참여의 폭을 넓히는데 기여하는 것도 우리의 역할임

5. 북미정상회담의 성과와 전망

□ 북미정상회담의 성과

- 남북미 3자 모두 평화와 공동 번영의 정책 기조를 공유함
 - 지난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됨. 작년 하반기에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과 핵 도발로 인해 최악의 연사로 상호간에 위협이 오가며 일촉즉발의 정면 군사충돌 위기까지 펼쳐진 것을 회고하면, 문재인 정부의 대북화해정책과 중재,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호응이 이어지면서 불과 몇 달 만에 70년간 적대적인 대립과 갈등을 벌여온 북한과 미국의 정상이 역사적인 대타협을 이룬 것은 극적인 반전이었음
 - 이번 북미 간 포괄적 합의는 과거와는 다른 분명한 차별적 성과와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그것은 바로 양국 정상이 직접 만나 개인적 신뢰 토대를 구축하였고 북한체제 안전보장과 한반도 비핵화, 관계 정상화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다시금 확인하였다는 것임
 - 이미 북한은 탄도 미사일 엔진 시험장을 폐쇄하였고 미국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추진 그리고 한미연합 훈련 중지 등의 의사를 분명히 밝히면서, 북미 양국은 향후 협상 기간 동안 북한의 비핵화 선제조치에 적극적으로 상응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나타나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매우 획기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
- 비핵화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의 인식적 토대 마련, 신뢰의 구축
 -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안전보장 제공을 약속하고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부동한 의지'를 재확인함으로써 양국의 핵심 요구사항들

에 대한 포괄적인 일괄타결이 이루어짐

-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을 몇 시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회담 성과에 대한 일각의 비판적 전망에 대해 반박했으며 "우리는 잘 될 것이다"라고 언급함
- 김정은 위원장도 북미정상회담 모두 발언을 통해 "여기까지 오는 길이 그리 쉬운 길이 아니었다."며 "우리한테는 발목을 잡는 과거가 있고, 또 그릇된 편견과 관행들이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었는데, 우리는 모든 것을 이겨내고 이 자리까지 왔다."고 밝힘
-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정상회담에서 미국과의 관계 개선 및 비핵화 의지를 분명하게 밝힘으로써 향후 남북관계와 북미 관계가 동시에 진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짐

○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 극적인 만남

- 북미정상회담의 합의문을 들여다보면, 제1항에 새로운 관계 수립에 관한 약속이 명시됨. 이번 회담을 통해 양국 간 신뢰 형성과 관계개선이 더욱 근본적인 문제로 다뤄졌음을 의미함
- 제2항과 제3항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과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포괄적 합의였으며 마지막으로 전쟁포로 및 전장 실종자에 대한 유해 송환 등 크게 네 가지로 마무리 됨
- 합의문에 '완전한 비핵화'는 포함되었지만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 폐기,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ismantlement)는 언급되지 않음. CVID는 핵폐기 검증 범위와 방법에서 북한의 주권을 침해 할 수 있는 개념이며, 제공 되어야 할 '불가역적' 체제안전보장조치가 CVID 아래 가능한지도 의문임
- 따라서 비현실적인 개념인 CVID를 합의문에 포함시키지 않고 후속협상을 위해 제한한 것이 바람직한 선택일 수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듯 김정은 위원장이 언급한 '완전한 비핵화'만으로 충분할 수 있고 향후 합의문 이행 과정에서 검증 완결 및 가역성에 대한 우려가 해소 될 수 있음

- 구체적인 조치나 시한이 합의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은 아쉬울 수밖에 없지만 이는 후속협상에서 구체적으로 다뤄야 할 과제로 남음

□ 북미정상회담의 전망

○ 북미관계의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

-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얻을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없을 것'이라는 언급을 하면서 유엔의 대북제제가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협사업이 본격적으로 재개되기는 어렵지만 북미관계 개선속도에 따라 경협환경이 급진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사전 준비작업 만큼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임
- 또한 북미관계 개선 합의에 따라 국제금융기구 등에서도 북한의 회원 가입 자격 검토나 북한 개발사업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늘어날 수 있음
-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합의문 서명식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백악관으로 초대할 것을 언급하면서 후속 북미회담 개최를 연상할 수 있는 언급을 함
-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국과 미국 정상 모두 김정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의지를 가지고 있고 협상이 가능한 인물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게 됨
- 북미가 정상회담에서의 합의 내용을 완전하고도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해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고위급 회담을 개최하기로 했기 때문에 북한 비핵화와 대북 안전보장 문제 등과 관련해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됨

○ 아직 안정적이지 않은 평화에 필요한 한반도 운전자의 역할

- 향후 북미 간 후속 협상은 낙관적 전망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언제 어디서건 장애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음
- 한국은 이번 북미정상회담 준비과정에서 미국 뿐 아니라 북한과 신속하고 긴밀한 직접소통을 통해 회담의 성공적 개최에 기여했듯 향후 한반도의 비핵화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임
- 특히 우선 가까운 시일 내에 가능한 종전선언을 위해 북미와 긴밀히 협력해야 하며,

평화협정 체결을 준비하기까지 남·북·미·중 간 협의를 추진하고 주도하는 역할을 할 필요성이 있음

- 당면과제로는 5.26 남북정상회담 결과 합의한 군사회담, 체육회담, 적십자회담, 등을 통해 북한에 대한 관여정책의 폭을 넓혀나갈 필요가 있고 군사회담을 통해서도 군사 도발 중단이나 평화수역 설정과 같은 분야에서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북한의 가시적 조치를 이끌어냄으로써 김정은 위원장의 대외전략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구심을 해소시켜 나가야 함
- 그러나 당분간 한반도를 둘러싼 전반적 환경은 여전히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테두리 안에서 형성될 것

○ 해결해야 할 문제

-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은 비록 그 내용이 추상적이지만 북미가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평화와 공존의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중요한 지침이 될 것이며 북미합의가 개념적이고 추상적이며 구체적 행동 조치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북미 양측이 구체적인 행동 방안에 대해 어떤 합의를 이루고 어떤 정책과 행동을 펼치느냐에 따라 성패가 판가름 날것으로 보임
- 이에 더해 비핵화가 진전되면서 미국의 대북제재가 완화되고 평양과 워싱턴에 이익 대표부나 연락사무소가 개설되면 이 과정의 선순환 움직임은 더 탈력을 받을 수 있음
- 한편 종전선언과 달리 평화협정체결을 통해 평화체제구축은 NLL 등 해상경계선의 확정 합의와 평화관리 및 보장기구의 설립 등 다양한 사안에서의 합의가 전제되므로 상당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북핵문제가 원활하게 해결되어 가면 평화체제 구축보다 북미관계 정상화를 먼저 시행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임

제3장 남북관계 회복에 따른 고양시의 당면과제

□ 지방정부 주도의 남북교류협력 사업 필요성

- 지방정부 주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1999년 1월 제주도가 북한에 감귤 100톤을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크게 확대되어 경기도, 강원도, 제주도, 인천시, 전라남도, 경상남도 등 상당수의 기초자치단체들이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음¹⁾
-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남북한 간의 사회문화 및 경제적 교류를 통해 상호이해와 협력을 제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존과 평화, 그리고 나아가서는 양 사회 간의 평화적 통합을 실현하는 것을 최종적인 목표로 함
- 따라서 지방정부 주도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중앙정부의 대북통일 정책 측면에서 지원하며 실제적 실천의 주체 역할을 감당하므로 지방분권 시대에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됨²⁾
- 지방정부 주도의 남북교류협력은 중앙정부에 비해 현장성이 강하고 상황에 맞는 임기응변이 용이하며 탄력적이고 민간에 비해 공공재정과 다양한 인력을 활용하여 남북교류협력의 공공적 목적성과 추진 사업의 일관성을 보다 많이 확보할 수 있음
- 하지만 지방정부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남북한의 화해·협력과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그간의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한계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 즉, 주변정세 및 남북 당국 간 관계의 변화에 취약, 중앙정부의 지원 미흡,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인력 및 전문성 부족, 일방적 지원의 성격, 일회성·전시성 사업의 추진, 지자

1) 중앙정부 및 일부 기업과 NGO의 영역으로 인식되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지방자치단체가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된 것은 2000년의 6.15 정상회담과 이에 따른 남북공동선언이 주효하였으며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 기조도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 본격 착수 및 확대에 크게 기여하였음

2) 하지만 지난 정부에서 발생하였던 금강산관광객 피살사건과 천안함 사태 후에 취해진 5.24 조치, 연평도 포격 등으로 최악의 남북관계가 전개되어 사실상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전면 중단되어 있는 상황임

정부들 간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중복투자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되어 있음

-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고 도래한 지방분권 시대 지역의 특성을 살린 맞춤형 남북교류협력사업을 개발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각 지방정부간 유기적인 상호협력 체제 구축해야 함

□ 지방분권 시대 새로운 남북교류협력 사업 모색의 필요성

- 문재인 정부는 명실상부한 자치분권을 위해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하면서, 제2국무회의를 제도화하고 입법·행정·재정·복지권의 이른바 4대 지방 자치권을 헌법화하며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는 내용도 헌법에 명문화하여 진정한 지방분권 시대를 열었음
-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서 보면 향후 남북관계 역시 중앙정부에 의해 수동적으로 이 끌여가기 보다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임
- 따라서 중장기적 관점의 고양시 발전방안에 대한 정책개발을 통해 남북교류협력이 발전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창조적인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됨

□ 독일통일과 지방정부 교류협력의 역할 시사점

- 한편, 국외사례로 독일 사례를 분석하는 것은 독일 통일 과정에서 서독 지방자치단체들이 추진한 동독과의 사회교류가 동서독 주민들 간 동질성 회복과 동독체제의 경직성 완화에 크게 기여한 것을 높게 평가했으며, 결국 이는 독일 통일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 됨
- 실제로 독일의 경우 통일되기 전 지자체 간 총 62건의 자매결연을 성사, 이는 서독과 동독 중앙정부 사이의 관계가 나빠질 때에도 중단되지 않고 지속이 가능하였다는 사실은 지방분권 시대 남북교류협력 그리고 남북관계 해법을 모색하는 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음

□ 2018 <남북정상회담>과 지방정부 남북 교류협력사업

- 역사적인 2018 <남북정상회담>의 결과인 「판문점선언」에서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사업 발판 마련 6.15를 비롯하여 남과 북에 다 같이 의의가 있는 날들을 계기로 당국과 국회, 정당,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민족공동행사를 적극 추진하여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고조시킬 것을 약속하는 합의가 포함됨
- 이를 통하여 남북 당국이 지방정부 차원의 다양한 분야의 교류 협력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오랜 기간 중단되었던 민간교류를 빠른 속도로 회복하고 당국 간 신뢰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임

□ 지방정부 맞춤형 남북교류협력사업 모색

- 지자체 주도의 남북 협력 관계 확대는 장기간 경색된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는 시작점임과 동시에 남북한 당국 및 민간 차원에 생산적인 대화국면을 조성함으로써 북한의 안정적 경제 개방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남북한 통일을 위한 경제 협력 기반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됨
- 접경지역 고양시의 특성과 변화된 남북관계 현실을 고려하여 새로운 교류협력과 기존의 교류협력을 아우르는 추진방식을 마련하고 고양형 맞춤 남북교류협력 과제를 도출이 필요함
- 지방정부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배경과 경과를 고찰하여 변화된 남북관계 환경에 맞는 고양형 맞춤 남북교류협력사업의 개발
- 또한 고양시의 기존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한 성과와 한계점 분석을 통하여 향후 지속가능한 사업 구상
- 지방정부(제주, 경기, 인천, 강원 등) 남북교류협력사업 성과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한 후 이를 고양시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적용
- 동서독 간 도시자매 결연 사례 분석을 통해 고양-개성 간 협력 방안 구축이 가능함
- 이를 통하여 고양시의 남북교류협력 현황파악 뿐 아니라 향후 진행할 교류협력 사업에 있어 체계적이고 전략적 사업 선정 및 수행을 도모할 수 있으며 지방분권시대남

**북교류협력 시대에 통일한국을 견인할 남북접경지역의 선도도시로서 고양시가 지향
해야 할 정책 비전 제시**

제4장 고양시 접경지역 거점도시 전략과제

- 통일시대 남북거점도시 고양시 구상은 지역 경제 발전, 시민 공감대 형성, 지방정부 지원 민단 주도의 형식으로 구축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비전과 세부 정책 과제를 수립하여야 함
- 지방정부 단위에서 도로, 철도 등의 사회간접자본과 유통물류시설에 대한 투자는 한계가 존재함. 따라서 국책 사업인 개성공단 연계 물류거점을 확보하여 중앙-지방이 공동으로 인프라를 마련하고, 한반도신경제지도의 교통 중심도시의 역할을 고양시가 감당함
- 개성공단이 재개되고 확대 될 경우 10년의 경험에서 드러났던 노동집약적인 산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전문 R&D센터를 통일한국의 고양실리콘밸리에 적극적으로 육성하여 배후단지로서의 기능을 확보함
- 『평화통일경제특구법』제정을 대비한 「통일한국의 고양실리콘밸리」를 활용한 고양형 통일경제특구를 제안함. 발전 제약요인이었던 『수도권정비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특별법인 상기법의 활용방안을 구체적 제시하여 선도적으로 대응함
- 동-서를 잇는 벨트 형태를 산정하되, 경기북부 고양을 중심으로 지리적 이점과 풍부한 인프라를 강조한 한반도신경제지도의 중심도시로 도약함
- 인근 접경지역 파주와 연계한 관광상품은 세계 유일의 분단지역으로 특수성 및 판문점, 민통선내 마을, 땅굴, 전망대 등 안보체험 자원의 활용이 가능하며 북측 지역 개성 관광사업과 접경지역 평화생태공원 및 안보관광을 연계해 종합적 관광 상품으로 개발, 중국과 북한을 연계한 뒤 한국으로 종착하는 상품도 고려해 국제적 네트워크 확대도 모색이 가능함
- 고양시의 문화기반 시설 중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장기계획으로 설립된 재단법인 고

양문화재단에서 개관한 동양 최대 규모의 복합문화체육공간인 고양어울림누리과 고양아람누리는 대표적 공연장으로서 고양시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함

- 고양시는 이미 한차례 국제 역도대회를 공동으로 개최한 경험이 있으며, 상당 수준의 빙상단 보유하고 있는바, 이를 적극 활용하여 스포츠 교류를 선도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바, 비정치분야, 특히 스포츠 분야의 교류협력의 역할이 매우 커진 상황에서 북한이 제안한 2021년 동계아시안게임의 공동 개최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남북 간 통일을 위한 수많은 문화행사가 있었지만, 이를 정례화시켜 상시적인 교류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정치적·일회성 이벤트 행사로 전락하여 남남갈등이 유발되었음
-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장기계획으로 설립된 고양문화재단을 중심으로 어울림누리, 아람누리 그리고 통일한국의 실리콘 밸리의 방송 영상단지를 활용한 정기적으로 남북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통일문화예술제를 제안함
- 남북교류협력의 경제적, 문화적 기반을 갖추는 것과 함께 '평화'에 관한 사회인식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함. 이에 인류의 보편가치인 인권과 국제사회의 평화공존·번영이라는 근본적인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시설이 필요함
- 경기북부 최대 접경도시 고양시, 남북평화경제의 관문 역할 감당을 위하여 일자리 창출을 통한 번역을 모색함
- 경기 북부 접경지역 남북교류의 전초기지를 고양을 중심으로 파주와 연계 개성·해주 연계한 평화통일경제특구 구상
- 미래형 첨단산업과 4차 산업혁명 기술 등이 결합하는 선진형 산업단지 육성 전략
-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이 참여, 평화공단 개념으로 조성하여 해외자본 유치 추진 전략
- 고양 문화콘텐츠 클러스터 조성- 일산테크노밸리 중심의 3D/4D, 방송, 가상현실 콘텐츠, 첨단의료산업 등 미래 신산업 육성
-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새시대를 맞아 남북관계 발전을 선도하고, 한반도 신경제 지도 구상이행의 중심도시 구상
- 100만 대도시임에 불구하고 각종 행정적 재정적 제약을 받았던 한계를 극복, 평화를

선도하는 경기북부 평화경제특별시로 구상

- 100만 대도시 특례시 지정으로 경기북부 평화경제특별시 도약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하여 교통과 경제가 모이는 특별시 구상
- 남북문화예술교류 활성화 (남북예술인 합동공연 및 정기교류전 추진) 및 4.27 남북 정상회담 기념 고양시 국제평화마라톤대회 개최
- 금정굴 평화공원 조성 및 현충공원 간 '화해와 공조의 길' 사업 추진
- 한강하구 남북공동연구 및 생태, 역사 관광벨트 조성
- 고양시 통일기록관 네트워크 구축

제5장 결론

-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새 시대를 맞아 남북관계 발전을 선도하고 평화경제특별시 고양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경기북부의 최대도시이자 대표적인 접경지역 고양시는 남북 교류협력 사업의 전진기지의 역할을 감당하여 한반도 평화시대를 이끌어가기 위하여 고양시의 당면과제를 도출하여 이에 대응해야 함
- 이에 100만 대도시 특례시 지정으로 경기북부 평화경제 특별시를 추진하여 경기북부 도시 연계 평화통일경제특구를 유치해야함
- 수도권 접경지역규제 피해 산정 국가 손실 요구하는 것을 시작으로 그 추진 근거를 마련하여야 함
- 평화경제특별시 역할을 위한 행정복합타운 조성과 경기북부 연계 평화통일경제특구 유치를 추진하여 남북경제교류 관련 기업 유치 및 남북공동 콘텐츠 제작 지원 센터 설립을 모색함
- 남북경제교류 관련 기업 유치 및 남북공동 콘텐츠 제작 지원 센터를 설립하여 4차 산업 플랫폼(방송영상단지, 일산테크노벨리) 조성을 통한 국제교류 지원 함
- 남북문화예술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남북예술인 합동공연 및 정기교류전 추진하고 4.27 남북정상회담 기념 고양시 국제평화마라톤대회 개최함
- 이밖에 금정굴 평화공원 조성 및 현충공원 간 '화해와 공존의 길'사업 추진하며 한강 하구 남북공동연구 및 생태, 역사 관광벨트 조성하고 고양시 통일기록관 네트워크 구축하여 평화통일 도시의 이미지를 공고히 해야 함